



#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

## 요약 보고서

삼성경제연구소

# 研 究 陣

専 務

首席研究員

研究員

# 국민소득 2만불로 가는 길

## - 목 차 -

|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 . 한국의 현 상황 ..... | 2  |
| II . 2만불의 의미 ..... | 7  |
| III . 돌파 전략 .....  | 16 |
| IV . 8대 추진과제 ..... | 27 |
| V . 추진 일정 .....    | 54 |

# I. 한국의 현 상황

## 1. 잃어버린 8년

### 1) 국민소득 1만불대에서 8년간 정체

□ 한국은 95년 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한 이래  
8년간 '魔의 万弗'에서 답보

- 1995년 10,823불 → 2002년 10,013불

□ 외환위기로 선진국 진입의 꿈이 좌절

- 96년 OECD에 가입했으나, 98년 외환위기로 6,744불까지 추락

OECD 선진국과 한국의 국민소득 추이



자료 : 통계청, 한국은행

## 2) 국가경쟁력 저하

□ 신용등급 하락, 환율 인상 등 국가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하락

- 국가신용등급과 국가경쟁력평가등급이 각각 2단계, 3단계 하락
  - 국가신용등급(무디스사): 95년 A1 → 98년 Ba → 03년 A3(-)
  - 국가경쟁력은 24위에서 27위로 하락 (IMD, 2002년)
  -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3위(OECD국가 중 10위, 2001년)
- 원화의 대외구매력(달러 대비)은 지난 8년간 무려 54% 하락
  - 원/달러 평균환율 : 771원(95년) → 1,193원(2003년)

국가경쟁력 추이



자료 : 무디스, IMD, 한국은행

## 2. 선진국 진입 착시 현상으로 미래가 불투명

### 1) 1만불은 개도국을 겨우 벗어난 수준

□ 1만불 도달 후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착시 현상 만연

- OECD에 가입하고 일부에서 우리 나라를 고소득 국가로 분류하자 선진국 진입의 착시 현상이 발생
  - 세계은행은 2002년부터 고소득 국가(인당 국민소득 9,266불 이상)에 우리나라를 포함
- 그러나 1만불은 개도국을 겨우 벗어난 수준
  - 멕시코, 터키 등 전형적인 개도국도 OECD 회원국
  - 1만불은 OECD 상위 20개국 평균소득의 38%
- 현재 우리는 생활의 기본조건인 의·식·주 중에서 衣와 食까지만 해결된 데 불과
  - 주택은 자가 보유율 54.2%로 일본의 1만불 시대인 62.4%보다 훨씬 낮아 주택난이 심각

한국과 일본의 주택보급률·자가보급률

| 구 분       | 일 본    | 한 국   |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
| 1만불 달성 년도 | 1981년  | 1995년 | 2002년  |
| 주택보급률     | 108.0% | 86%   | 100.6% |
| 자가보급률     | 62.4%  | 53.3% | 54.2%  |

자료 : 통계청, 건설교통부

## 2) 성급한 제몫 찾기, 집단 이기주의 만연

- 정치·사회적으로 민주화와 분배 욕구가 높아지면서  
이념, 계층, 지역, 세대간 갈등이 확산되고 사회통합력이 약화
  - 1만불 이후 분배 욕구가 커지고, 보수·진보간 이념갈등이 발생
- 제몫 찾기형의 집단 시위와 노사 분류가 심화
  - 1만불을 달성한 후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고,  
노사분류는 대형화·장기화·과격화
  - 한국의 노사관계는 인구 2천만명 이상 30개 경제권 가운데  
가장 적대적인 것으로 평가(IMD, 2003년 세계경쟁력 연감)

노사 분류와 근로 손실 일수

| 구 분   | 한국('00) | 일본('99) | 미국('00) | 영국('00)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분류 건수 | 250     | 154     | 39      | 212     |
| 손실 일수 | 144.1   | 0.7     | 15.5    | 20.3    |

주 : 손실 일수는 근로자 1,000명당 노사 분류로 인한 손실일

## 3) 기업투자와 국민저축 감소

- 근면, 높은 저축률 등 한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었던  
덕목이 급격히 소멸
  - 소득 이상으로 과도하게 소비하면서 가계 빚 확대
    - 총저축률은 1995년 35.5%에서 현재 26%로 하락
    - 신용불량자 300만, 가계부채는 GDP의 74% 수준인 440조원 수준

- 노사분규 만성화, 규제완화 지연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투자는 급감하는 반면 해외투자는 계속 증가
- 설비투자/GDP 비중은 95년 14.9%에서 2002년 10.7%로 급락
- 2001년부터 국내기업의 해외투자가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상회

#### 4) 미래 전망도 불투명

□ 경제 활력 저하로 선진국 진입이 요원해 지고 최악의 경우 영원한 2류국으로 전락할 우려

- 1만불 이후 경제 활력이 급속히 저하되며 잠재성장률이 이미 7%에서 5% 대로 하락
- 출산율 저하, 투자침체로 요소투입 증가율이 2%대로 둔화
- 생산성 증가율도 3%대에서 정체

※ 민주화는 정치적 자유가 결여된 국가에서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지만, 이미 적절한 자유가 달성된 경우에는 성장을 저해 (하버드대 로버트 배로 교수, Getting it right, 1999년)

-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잠재성장률은 4.0%나 그 이하로 추가 하락할 전망

기간별 잠재성장률 변화 추이

(단위 : %, %p)

| 구 분   | 5천불 달성기<br>(70~89년) | 1만불 달성기<br>(90~95년) | 1만불 이후<br>(96~2003년) | 2004~10년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잠재성장률 | 7.9                 | 7.0                 | 5.4                  | 4.0      |
| 요소 투입 | 5.1                 | 4.0                 | 2.3                  | 2.0      |
| <자본>  | <2.3>               | <2.2>               | <1.3>                | <1.4>    |
| <노동>  | <2.9>               | <1.8>               | <1.0>                | <0.6>    |
| 생 산 성 | 2.8                 | 3.0                 | 3.1                  | 2.0      |

## II. 2만불의 의미

### 1. 마의 만불은 세계 공통 현상

□ 2만불을 달성한 선진국들도 '마의 만불 시기'를 경험

- 현재 선진국들은 대부분 70~80년대에 인당 소득 1万弗 달성
  - 1만불에서 2만불까지 평균 9.2년 소요
- 복지지출이 과도하게 증대하여 성장률이 하락
  - 1万弗 도달후 경제성장률이 평균 0.6%p 하락
  - 네덜란드, 영국 등 일부 선진국은 경제위기에 직면

2万弗 이상 국가의 인당 소득

| 분류    | 국가    | 현재 국민소득<br>(弗, 2002년) | 달성시점 (년) |     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1만불      | 2만불  |
| 4만불국가 | 룩셈부르크 | 46,631                | 1979     | 1988 |
|       | 노르웨이  | 42,262                | 1978     | 1987 |
| 3만불국가 | 美國    | 37,620                | 1978     | 1988 |
|       | 스위스   | 36,678                | 1978     | 1986 |
|       | 덴마크   | 32,014                | 1978     | 1987 |
|       | 日本    | 31,343                | 1981     | 1987 |
|       | 아일랜드  | 30,891                | 1989     | 1996 |
| 2만불국가 | 스웨덴   | 26,926                | 1977     | 1988 |
|       | 홍콩    | 26,089                | 1988     | 1994 |
|       | 영국    | 26,041                | 1987     | 1996 |
|       | 네덜란드  | 25,998                | 1978     | 1991 |
|       | 핀란드   | 25,283                | 1980     | 1988 |
|       | 독일    | 24,367                | 1978     | 1991 |
|       | 싱가포르  | 20,887                | 1989     | 1994 |
|       | 캐나다   | 21,930                | 1980     | 1989 |

□ 대부분의 개도국은 1만불을 전후해 좌절

- 아르헨티나는 20세기초 세계 4강(미·영·불 다음) 진입 후 추락
  - 친노동과 대중영합주의(페로니즘)로 국력 쇠퇴
- 사우디 등 산유국은 1만불 돌파 후 자만과 賦存資源의 함정에 빠져 추락
- 대만은 대기업 및 자본집약적 산업의 부재로 11년간 정체



## 2. 2만불의 의미

### 1) 선진 경제권 진입과 삶의 질 향상

□ 2만불 국가는 물가안정, 산업구조, 정보화, 사회발전 지표에 있어 1만불 국가와 근본적 차이

- 서비스업 비중, 수출 중 첨단기술 제품 비중, 외국인 직접투자 비중 등이 현격하게 높음

- 첨단기술 수출비중과 외국인 투자액은 각각 2배, 4배를 상회
- 물가 수준도 안정
- 2만불 국가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2.5%(1만불 국가 3%)
- 사회간접자본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낳고 삶의 질에 격차

□ 성장을 계속해야 일자리가 창출

- 잠재성장률 1%p 상승시 실업률 0.3%p 하락

2만불 상회국가와 1만불 국가의 비교

| 구 분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만불 상회국가        | 1만불 국가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소득 수준  | 1인당 소득(불)                  | 27,227          | 12,156          |
| 물가     | 물가상승률(%)                   | 2.5             | 3.0             |
| 산업구조   | 산업비중(1차:2차:3차, %)          | 2.0: 29.0: 69.0 | 4.8: 30.1: 64.2 |
|        | 첨단기술제품 수출률(%)              | 22.0            | 10.1            |
|        | 외국인 직접투자(십억불)              | 26.9            | 6.8             |
| 삶의 질   | 기대수명(세)                    | 78.5            | 75.7            |
|        | 유아사망률(천명당)                 | 4.5             | 8.3             |
|        | 하수처리시설 접근도<br>(수돗물 접근도, %) | 100<br>(100)    | 88.0<br>(93.5)  |
|        | 초등(중등)과정 등록률(%)            | 97.8(90.1)      | 90.1(83.8)      |
|        | 도로포장률(%)                   | 83.3            | 82.8            |
|        | 비행기 이륙수(만대)                | 70.4            | 21.9            |
| 정보화 수준 | 1천명당 PC(대)                 | 429.5           | 194.1           |
|        | 천명당 전화회선(라인수)              | 1,327.3         | 930.8           |

주 : 2만불 상회국가 21개국, 1만불 국가 6개국 비교분석 결과

## 2) 분배 개선과 노사 안정

□ 우리나라는 성장을 통해 분배를 개선해 온 국가

- 80년대 중반 고성장으로 소득분배 개선
- 성장 정체, 경제위기시 소득분배 악화
  - 외환위기 이후 분배 구조가 급격히 악화

□ 분배 중시의 서유럽도 90년대말 성장 정책으로 전환

- 우파 정권 증가 (5개국 → 12개국)
- 좌파 정권인 독일(슈뢰더), 영국(블레어)도 우파 정책을 시행

우리나라의 성장률과 분배구조



주 :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소득 불균형 심화

### 3) 고령화 시대 대비

□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

- 2019년 고령사회(65세이상 인구 14%)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
  -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(65세 이상 인구 7% 기준)에 진입
  - 2026년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20%로 초고령사회에 진입 추정
- 선진국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고령화
  - 선진국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40~115년 소요되었으나 우리는 19년 소요 예상

고령인구 비중 추이



자료 : 통계청

□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도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

-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할 부양인구는 증가하는 반면, 부양을 담당할 생산활동인구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
  - 생산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가 2000년 10.1명에서 2007년 18.7명, 2010년에는 14.8명으로 급증

- 고령층 인구의 증가로 생산가능인구 자체도 고령화
- 생산가능인구 중 60~64세 인구의 비중이 2000년 5.4%에서 2007년과 2010년에는 각각 5.6%, 6.2%로 확대

□ 소득 배증으로 고령인구를 부양하고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의 재정수요 재원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

-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 불안이 지속

#### 4) 통일재원 마련

□ 남한 중심의 통일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어 통일재원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

- 북한은 핵 문제 등으로 고립상태에 있으며, 심각한 경제난으로 체제 존속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
- 통일은 동북아 중심 국가 실현을 위해서도 긴급

□ 향후 통일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

- 독일의 경우 90년 통독 이후 매년 GDP의 약 4%를 동독 재건 등 통일비용으로 사용
- 2002년까지 약 7,000억 달러의 통일 비용 투입
- 우리는 초기 5년간 GDP의 10%인 2,500억불 예상
- 남북한간 경제력 격차는 동서독보다도 더욱 큰 실정

독일과 한국의 경제수준 비교

| 구분   | 독일 (1989년)                   | 한국(2002년)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GDP  | 13,640억불                     | 4,766억불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당소득 | 18,961불<br>(서독 : 동독 = 3 : 1) | 10,013불<br>(한국 : 북한 = 13 : 1) |
| 인구   | 6,200만명<br>(서독 : 동독 = 4 : 1) | 4,800만명<br>(한국 : 북한 = 2 : 1)  |

자료 : 통계청, 한국은행

## 5) 국가채무 조기상환

## □ 국가 채무의 단기 급증으로 재정건전성 악화

- 재정건전성은 경제안정의 기반
  - 남미, 유럽 후진국의 경제정체 원인은 재정악화
- 외환위기 이후 국가 채무가 계속 증가
  - 국가채무/GDP : 96년 12.0% → 02년 22.4%
-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국가가 보증한 채무 역시 급증
  - 국가보증채무/GDP : 96년 1.8% → 02년 17.2%

국가채무의 추이

자료 : 재정경제부, 기획예산처

- 국가채무/GDP비율이 OECD국가의 평균수준(73%)에 비해 낮으나  
국가보증채무의 국가채무 전환 가능성 등으로 악화될 가능성
- 국가보증채무의 대부분인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34%로 저조  
→ 보증채무(GDP대비 17.2%)의 상당부분이 국가채무화할 가능성

### 3. 선진국의 2만불 돌파 비결

- 정치 리더십으로 국력을 결집
  - 경제를 우선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 
분출하는 사회갈등을 조정
  - 대처수상과 레이건 대통령은 결단력과 강한 추진력을 발휘
  - 국가 비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
  - 아일랜드의 경제 기적은 정치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가능
-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
  - 국별 실정에 맞는 노사 안정 대책을 실시
  - 서유럽의 경우 사회협약을 통해 임금 안정과 산업평화를 유지
  - 친기업 성향의 영국, 미국 등은 법의 엄정한 집행(rule of law)을 통해 노사 안정을 달성
  - 기업규제 철폐, 세금 인하로 기업 활력을 제고
  - 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는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
  - 대처 정부는 노사개혁 및 금융시장 자유화를 단행
  - 세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촉진

## □ 전통 제조업의 혁신과 신성장 엔진의 발굴

-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이만불 달성을 구체화
  - 기존 제조업의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금융업, 비즈니스 서비스 등 신산업에 도전
  - 강소국의 경우 산업 클러스터 육성 등 신산업정책을 적극 추구
- 성장엔진의 발굴·육성을 위해 R&D 투자를 강화
- 국적을 불문하고 해외의 고급인재를 유치하고 인적자원을 양성

주요 OECD국가의 主力産業

| 구 분  |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미국   | 화학, 정보통신, 정밀기계                 | 관광, 금융                 |
| 영국   | 화학, 일반기계, 정보통신, 항공우주           | 관광, 금융, 통신서비스, 비즈니스서비스 |
| 독일   | 화학, 정보통신, 자동차, 일반기계, 전기기계      | 금융, 비즈니스 서비스           |
| 프랑스  | 음식료, 정보통신, 자동차, 조선, 항공우주       | 관광, 금융, 비즈니스 서비스       |
| 네덜란드 | 화학, 철강, 일반기계, 정보통신             | 통신서비스, 물류, 비즈니스 서비스    |
| 핀란드  | 음식료, 철강, 일반기계, 정보통신            | 비즈니스 서비스, 금융, 물류       |
| 스웨덴  | 목재종이, 정보통신, 정밀기계, 자동차          | 금융, 통신서비스, 관광          |
| 이탈리아 | 음식료, 목재종이, 일반기계, 전기기계          | 관광, 통신서비스, 비즈니스 서비스    |
| 일본   | 음식료, 철강, 일반기계, 전기기계, 정보통신, 자동차 | 운송, 통신                 |

### III. 돌파 전략

#### 二万佛 돌파 전략 체계도



## 1. 戰略 目標 : 2010년 2만불 달성을 위한 선택

### Global 10-10 戰略

국제 경쟁력을 갖춘 10개의 산업과 10개의 기업을  
육성하여 국민소득 2만불 달성

#### 1) 10대 성장 동력 (Global Competitive Power 10)

□ 2010년에 2만불을 달성하려면 454조원의 GDP 증가 필요

- GDP : 2002년 596조 원 → 2010년 1050조 원
- 기존 산업이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 성장하여 신규로 창출할 수 있는 GDP는 279조원
  - 부족분 175조원은 기존 산업의 획기적인 경쟁력 제고나 신산업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창출 불가
  - 175조원은 반도체산업 부가가치의 14배, 자동차의 7배 규모

□ 국제경쟁력을 갖춘 10개 성장 동력(Global Competitive Power 10)을 선정 · 육성하여 성장을 선도

- 선택과 집중에 의거 신성장 동력을 선정하고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고도성장을 실현
- 한국을 먹여 살릴 차세대 성장 산업 육성
- 산업 선정은 선진국의 산업구조 변화, 산업 발전의 메가트렌드, 한국의 강점 분야 및 사업 유망성 등을 고려

- 민간 주도형 산업 발전 모델을 추구하고, 소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효율적 자원 이용에 주력
- 산업 차원에서의 산관학 협력 체제의 구축, 투입 요소의 질적 고도화, 지원 및 연관 산업 육성 등

### 2만불 달성의 조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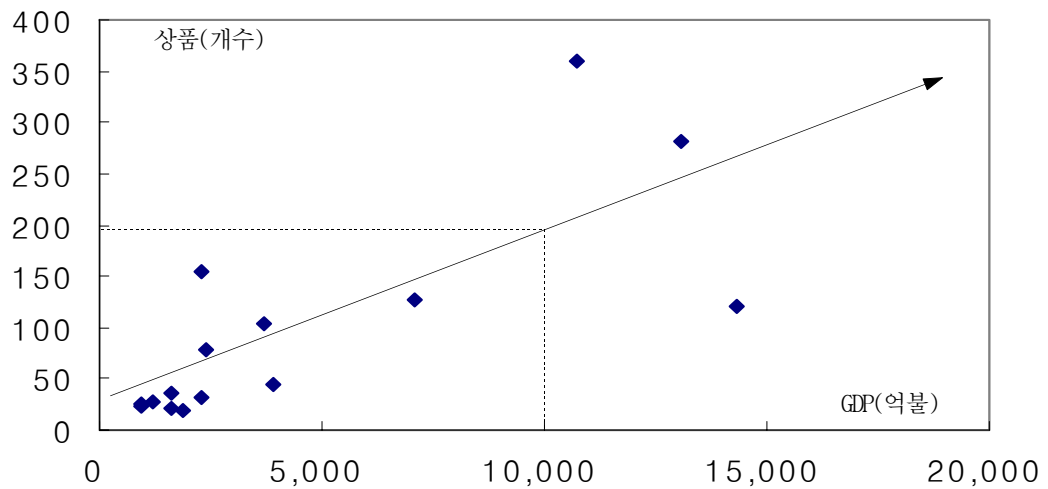
주: 2010년 환율 1059원 가정

## 2) 10대 글로벌 존경받는 기업 (Global Most Admired 10)

□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해서는 약 200개의 1등 상품이 필요

- 2만불 이상 선진국의 GDP와 1등 상품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
  - 2만불 이상 선진국의 1등 상품 평균 보유개수는 192개
- 현재 한국의 1등 상품 수는 69개로서 2010년까지 매년 새로운 1등 상품을 19개씩 확보해야 가능한 수준
- 1등 상품 196개는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우량기업 10개 이상이 있어야 달성할 수 있는 규모
  - 2002년 삼성전자가 보유한 1등 상품 개수는 19개

이만불 이상 선진국 GDP와 1등 상품 개수 상관관계



□ 삼성전자 수준의 글로벌 우량기업 육성을 통해 국부 창출을 선도

- 한국이 新국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 
'투자 → 1등 상품 → 수출'의 선순환 경제구조가 필요
- 선순환 경제시스템의 원동력은 글로벌 초우량기업  
· 대규모 매출 · 수익 창출과 세계시장 개척으로 경제 성장 견인



□ 2만달러 시대 달성을 위해 '글로벌 존경받는 기업 10'

(Global Most Admired 10)을 목표로 설정

- '크고 강한(Big & Strong) 기업'의 확보가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한 '1차적 필요조건'
- 기업 규모나 수익성 측면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업들이 많지 않은 국내에서는 이 전제조건이 특히 중요
- 기업의 윤리적 경영과 사회적 역할 수행을 통한 신뢰 획득은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한 '2차적 필요조건'
- 윤리경영은 이제 '부담되지만 필요한 것'이 아니라 '실행하지 않으면 기업 도태를 유발하는 것'
- 포춘지 선정 '세계의 존경받는 기업' 업종별 Top 10에 10개사 이상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'세계의 존경받는 기업'은 경영성과, 경영의 질, 미래전망,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
- 현재 한국의 업종별 Top 10 진입 기업은 삼성전자 유일

### 포천誌 선정 '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'

- ▷ Fortune誌와 Hay Group 컨설팅은 전세계 345개 주요기업의 경영자와 관리자 등 만여명을 대상으로 기업실적을 토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"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"을 선정하여 발표.
- ▷ 존경받는 기업에 대한 평가는 혁신성, 기업자산 운용, 글로벌화, 경영의 질, 임직원 자질, 제품과 서비스 품질, 장기투자 가치, 재무적 투명성, 사회적 책임 등 9개 범주에서 응답자들이 1점에서 10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경쟁업체 순위를 평가하고, 올스타 목록은 이 평가를 기초로 설문자들의 투표를 통하여 이루어짐.

###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Top 10

| 순위 | 기업명          | 산업부문 | 국가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|----|
| 1  | 월마트          | 종합소매 | 미국 |
| 2  | 제네랄 일렉트릭(GE) | 전자   | 미국 |
| 3  | 마이크로소프트      | 컴퓨터  | 미국 |
| 4  | 델 컴퓨터        | 컴퓨터  | 미국 |
| 5  | 존슨앤존슨        | 제약   | 미국 |
| 6  | 버크셔 해더웨이     | 보험   | 미국 |
| 7  | 프록터앤갬블(P&G)  | 가정용품 | 미국 |
| 8  | IBM          | 컴퓨터  | 미국 |
| 9  | 코카콜라         | 음료   | 미국 |
| 10 | 페덱스          | 배송   | 미국 |

주 : Fortune, 2003. 3

## 2. 戰略 方向 : Global 10-10의 육성

### 혁신주도형 성장 지향: 強小國모델

협소한 시장과 열악한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 
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 
'革新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' 환경 조성이 필수적

### 1) 혁신능력 제고가 Global 10-10 달성의 관건

□ 혁신없이 Global 10-10의 목표 달성이 불가

- 중국이 세계의 생산 공장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면서  
강력한 경쟁 상대로 등장
- 부가가치의 원천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전되면서  
선진국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차별화 가능한 경쟁우위 요소를  
창조하는 능력이 중요
- 국경없는 무한경쟁(Global Mega Competition)의 진전으로  
국내에서도 선진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

□ 현재 한국경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지만,  
이를 뒷받침해 줄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태

- 자본과 지식을 축적한 선진제국과 발빠르게 추격하는  
후발국 사이에서 Nut-Cracker 상황에 직면
- 요소투입형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잠재성장률 저하

-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만이  
한국 경제의 활로를 열 수 있으나,  
외환위기 이후 기업활동의 저하, 투자부진 등  
경제의 역동성이 약화
- 대립적 노사관계 등 이익집단간의 '제몫 찾기'로 사회갈등은  
심화되고 사회적인 비효율성이 확대

□ 선진제국은 국가적인 혁신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

- 민간 부문의 활력(dynamism)과 기업가정신(entrepreneurship)  
함양에 주력
  - 혁신의 견인차인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하기  
좋은 환경 조성
  - 투입요소 고급화, 인프라 재정비, 정책·규제환경 개선,  
사회통합 공고화 등을 통해 지속적 혁신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

□ 왕성한 기업가 정신의 발현과 혁신 창출을 위한 기반을  
조성하여 Global 10-10을 구현

- 정부 주도형의 산업이나 기업 육성 보다는 국가 전체의  
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경쟁력있는 기업·산업이 등장할 수  
있는 기반을 구축
- 혁신과 역동성을 유발할 수 있도록 경제 시스템 재설계
  - 혁신 주체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
- 혁신의 원천이 되는 양질의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

## 2) 한국형 경제 시스템의 지향점: 강소국 모델

- 협소한 국내시장과 열악한 부존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 
혁신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강소국형의 성장 전략을 추구
- 소국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서 起業家精神(entrepreneurship)  
을 장려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강소국의  
특징
-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범사회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

### 강소국의 특징

- ▷ 기업가정신을 장려하는 사회시스템
  - 도전과 혁신을 중시하는 사회환경
  -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가정신의 고양
  -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
- ▷ 선택과 집중을 통한 주력 산업 육성
  - 주력 사업 선정 및 육성
  - 산업단지(클러스터) 조성 등 인프라 조성
- ▷ 기동성을 창출하는 범사회적 협력 네트워크
  - 사회합의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반전
  - 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해 저비용 고효율 경제 구축
  - 상시적인 산·관·학 협력네트워크 조성

주 : 유럽 및 동남아 강소국 사례 분석 결과

## □ 경제의 역동성(Dynamism)과 사회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주력

- 장기적인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역동적인 시장경제시스템을 창출할 필요
  - 과거 중화학공업이나 반도체 사업진출 등은 단순히 시장메커니즘만을 고려하면 불가능했을 것임
- 과감한 규제 완화와 사회 전반에 걸친 투명성 제고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지대추구(rent seeking) 유인을 축소
  - 영국이 산업혁명을 앞서 달성할 수 있었던 한 원인은 정치적 민주화로 기득권 계층의 지대추구활동이 감소했기 때문임(North & Thomas)

## □ 기업활력 및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의 역동성 강화

-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기업 풍토를 조성
  - 예측불허의 경영 환경 하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企業家精神이 필수적
- 금융시스템은 불안정한 한국 금융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시장지향형과 관계지향형 모델의 절충을 추구
  - 금융의 산업자본에 대한 지원 기능을 복원하고,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업자본 참여 등 상호협력을 강화
-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한 노사대타협 등 기업의 발전을 전제로 한 상생적 협력관계 구축
-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미래 산업구도의 청사진 제시와 이를 위한 인프라 제공

□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노사정 합의를 통한 국력 결집을  
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

- 풍부한 자원과 축적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나 몇 단계 앞서 있는 강소국을 따라 잡기가 어려운 상황
- 적은 투자로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규제개혁과 사회통합에 주력하는 전략적 접근 필요
- 빈약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창의적인 기업가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초점

□ 기업하기 좋은 나라 구현으로 개방형 강소국으로서의 위상 강화

-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의 육성은 물론, 세계적 기업의 유치에 위해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이 중요
  - 규제 완화, 인프라 구축, 투입 요소의 질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통해 세계 우수 기업과 인재들이 모여드는 동북아 허브의 위상을 확보
- 빈약한 자원과 시장의 제약을 탈피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

## IV. 8대 추진과제

- 현상 타개를 위한 ‘단기 긴급과제’와  
성장기반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‘중장기 전략’ 병행 추진(3+5)

### 2만불 진입전략 - “3+5” 과제 추진



- 단기적으로 교착된 현안을 돌파하고 2만불 비전 제시를 통해 전국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

- 노사화합 달성 및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하려는 의지를 조속히 복원

-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및 기업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입요소와 인프라 고급화를 달성

- 향후 한국경제를 견인할 성장동력 및 글로벌 대표기업 발굴·육성
- 또한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기업생태계 전체의 경쟁력 제고
- 인적자원 등 투입요소의 고급화를 추구하고 경제특구를 조성, 최고의 인프라와 기업환경을 제공

## 1. 국가리더십 발휘

- 세대간, 이념간,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고 역량을 결집하는 국가리더십이 절실
  - 국가리더십은 국민적 의지를 한 방향으로 모으고 국가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구심점
  - 교착상태의 현안에 대한 정면돌파 및 사회적 대타협 유도 등 난국 타개의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
- 선진국들은 万弗 장벽에서 걸출한 국가지도자의 강인한 리더십 발휘를 통해 위기를 극복
  - 대처, 이케다, 아데나워 등은 탁월한 리더십 발휘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 번영의 초석을 마련

### 국가리더십의 성공사례

| 구분   | 대처(영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이케다(일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아데나워(독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위기상황 | - 영국병: 경제활력저하<br>• 노조 파보호와 노동시장 경직<br>• 70년대 후반 마이너스 성장                 | - 좌우이념 대립으로 사회혼란 심화<br>- 일본경제비관론 만연<br>• 5%대 저성장 예상        | - 패전으로 경제기반 멸실<br>• 대도시 80% 파괴<br>• 공업시설 대부분 유실                      |
| 돌파전략 | - 대처리즘에 입각한 구조개혁<br>• 노조 파업에 강경 대응<br>• 국영기업 민영화, 규제완화<br>• 외국인 투자적극 유치 | - 소득배증 계획<br>• '10년내 소득 2배'의 비전 제시<br>• 산업구조고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| - 성장중시의 시장경제 정책 추진<br>• 경제가 본 궤도에 올라선 후 사회보장 및 분배 개선<br>• 친서방 실용주의외교 |
| 성 과  | - 재임기간 중(79~90) 인당 소득 2.2배 증가<br>- 유럽 제2의 경제부국 실현                       | - 계획기간중(61~70) 연평균 11% 성장<br>- 인당 소득 3.4배 증가               | - 재임기간 중(49~63) 인당소득 4.9배 증가<br>- 이후 20년간 독일 번영 기초                   |

□ G7 수준의 정치행정 선진국을 지향하고 정책의사결정 능력 및 정책 실행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

- 정부개혁과 정치시스템 혁신을 통해 생산적 정치를 구현
- 정치논리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 경제논리에 의한 경제정책을 추진

## 실천과제

### ① 2010년 소득 2만불 달성을 국정 비전으로 제시

□ 2만불 국가비전을 선포하고 마스터플랜 및 부처별 실천과제 제시

- 소득배증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성장위주의 정책기조확립
- 10개년 로드맵이 포함된 마스터플랜을 작성(2003년말 한)
  - ‘동북아중심’, ‘지역균형발전’ 등 기존 국정 아젠다 통합

□ 범 정부조직과 민간을 망라한 추진체계를 구축

-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민관간 노하우와 지혜를 총동원하여 2만불 세부전략을 수립하고 국민공감대를 조성

### ② 현안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정면 돌파

□ 교착상태에 빠진 현안을 과감한 결단을 통해 정면돌파하고 여론이 악화되더라도 국가리더십을 회복

- 이해집단의 저항을 정면 돌파하여 성공사례를 축적

- ※ 브라질의 룰라대통령은 당선후 지지층인 노조로부터 ‘배신자’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경제회복을 위한 성장위주의 경제개혁 추진
- ※ 슈뢰더 총리 역시 지지기반의 이탈을 감수하면서 아젠다2010을 추진, 근로자 복지혜택을 대폭 감축하고 기업부담 완화를 추진

#### 현안의 처리 방향

| 현 안    | 처 리 방 향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노사분규   | - 2003년 말까지 분규 중단 선언(노조 지도부 설득) |
| 권력형 비리 | - 수사를 철저하게 하면서 정치적 타협을 병행       |
| 남북관계   | - 미국과의 공조 하에 대북 대화와 경제지원 지속     |
| 개인부채   | - 손실을 사회가 일부 부담하고 재기 기회를 부여     |

### ③ 갈등조정 시스템 구축

- 갈등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
  - 갈등해결 절차, 피해보상 등을 담은 「분쟁조정법」을 제정
  - 갈등해결을 위한 제도로서 「사회갈등조정위원회」를 설치
    - 정부는 갈등 과정에서 조정자, 심판자로서 역할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주력

### ④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천

- 대통령 관련 인사와 집권여당의 도덕성을 최우선 회복
  -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對국민 양해와 정치적 타협으로 돌파

□ 사회적으로 도덕성회복 운동 전개

- 지도층의 부정·부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엄벌
- 공직임용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부정부패 연루자 배제
- 부의 사회환원을 유도하고 이를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

⑤ 사회안전망 보강과 중산층 육성

□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빈곤층에게 재상승의 기회를 제공

- 빈곤층의 「일하려는 의지」에 상응하는 복지혜택을 부여
- 실직자 재취업, 빈곤층 소득원 발굴 등을 집중 지원
-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사회정책 프로그램을 가동
- 기업들은 전문 노하우와 일터를 제공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

⑥ 정부 혁신과 행정역량 강화

□ 경제부처(재경부, 산자부, 정통부, 과기부, 노동부 등)간 역할분담과 기능 연계 명확화

- 성장동력 창출 등 공동과제에 대한 협력 추진을 시도
- 교육인적자원부 등 유관 부처와도 긴밀한 업무연계 체제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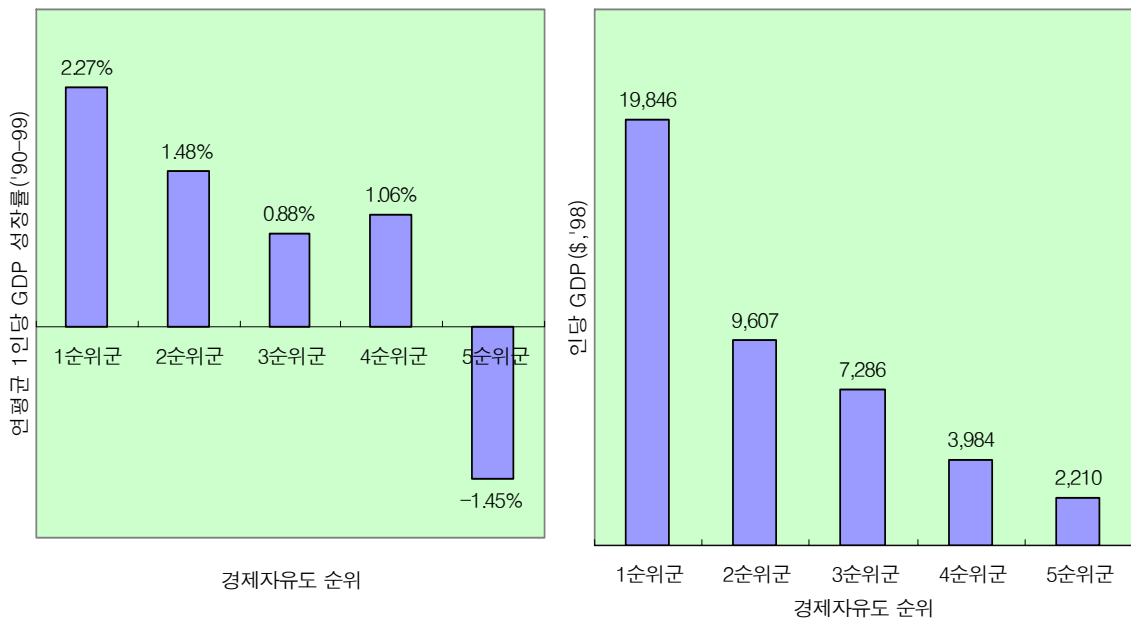
□ 정책실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업무를 고부가가치화

- 핵심정책 설계와 점검 기능을 재정비
- 저부가의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아웃소싱

## 2. 기업활력 제고

-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투자마인드와 기업활력의 복원 없이는 고도성장이 불가능
  - 대표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기업가정신 회생의 걸림돌
  - 한국은 규제 증대로 1995~2002년간 경제자유도가 크게 하락
  - 선진국은 만불장벽에 직면한 80년대초 레이거노믹스를 필두로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
- 규제완화 등으로 높은 수준의 경제자유도를 달성한 국가들이 고소득을 실현

경제자유도와 경제성과



주 : 각 순위군은 5분위 수 기준 (1순위=상위 20%, 5순위=하위 20%)

자료: The Fraser Institute,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1 Annual Report

## 실천과제

- 기업에 대한 직접 규제를 최소화하고 정부는 합리적 규칙제정자, 인프라 제공자로서의 생산적 역할 담당
  - 하향평준화식 규제보다는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
  - 경제자유도와 기업환경에 대한 해외인지도를 획기적으로 제고

### ① 시장을 통한 기업규율

- 기업 규제를 최소화하여 국내외 기업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
  - 기업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시장메카니즘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기업의 역량을 강화
  - 규제에 대한 법률구조의 원칙을 네거티브(negative) 시스템으로 전환
    - 법에 금지 조항만을 명시하여 이를 규제하고 그 이외의 경제행위는 시장 자율원리에 위임

### ② 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의 재검토

- 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등 규모에 의거한 규제를 철폐
  - 협소한 국내시장의 시각으로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
  - 기업의 대형화·집중화에 대한 규제보다는 경제력 집중에서 파생하는 폐해를 규제하는데 중점

### ③ 투자관련 규제 개혁 및 지원 강화

- 부채비율 200%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도권 입지에 관한 규제를 완화
  - 은행과 개별기업간에 신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
  - 수도권에 적용되는 국내기업의 첨단산업에 대한 입지 및 투자규제를 완화
-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 등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

### ④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제도 개선

-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고 기업조직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영환경을 조성
  - 그룹경영 對 독립경영, 전문경영 對 소유경영 등 경영구조를 기업 경쟁력 차원에서만 판단
  - 현행 지주회사 설립의 제한요건을 완화

### ⑤ 친기업적 사회분위기 조성

-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,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 사회적 후원 분위기 조성
  - 네덜란드에서는 1백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대기업에게 왕실에서 ‘Royal’(네덜란드어로는 Koninklijke)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여 사회적 존경을 유도

### 3.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

#### □ 현재 노사관계의 악화가 소득배증의 걸림돌로 작용

- 동북아중심국가의 비전이 각종 파업으로 암초에 직면
  - 화물연대 파업, 조흥은행 파업 등으로 물류 및 금융 허브의 이미지가 치명적으로 훼손
- 선진국은 소득 1만불~2만불 시기에 노사관계 안정을 달성
  - 영국은 대처수상의 정면돌파로, 네덜란드는 바세나협약 시 노동계의 대폭적 양보로 노사평화를 달성



주 : 한국은 만불회복시점(2002)과 비교

### 실천과제

#### ① 소득배증을 위한 한국형 「신사회협약」 체결

#### □ 노사정 대타협과 ‘노사평화선언’을 통한 생산적 협력관계 구축

- 노측은 한시적으로 무분규 선언 및 물가인상률 이내의 임금인상을 수용

- 정부와 기업은 주5일제 시행, 소득세율 인하, 임대주택 확대, 고용안정 및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을 강화
-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 이내의 임금인상 관행을 정착

## ②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노사관계 조기 정착

□ 엄정한 법 집행으로 法과 原則이 적용되는 노사관계를 정착

- 불법 분류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여 합리적 노동쟁의 관행을 정착
- 노사간 자율협상 풍토를 조성하되 위협받는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- 불법분류에 따른 사후적 배상책임,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항 신설

## ③ 한국형 경영참가 모델 조기 정립

□ 경영권을 침해하는 정치적 경영참가를 지양하고

- 근로생활의 질 향상, 작업장 효율 증대 등 생산적 경영참가 유도
- 작업장내 노사협의회를 통한 경영참가를 활성화
  - 투명경영의 실천을 위한 노사간 정보공유를 활성화
  - 분기별 노사협의회에서 「기업경영설명회」를 병행·운영

#### ④ 노사관계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

- 경영권과 노동권이 상호존중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정이 필요
  - 불법 및 연대·동정과업의 경우 대체근로를 허용해  
개별 사업장의 조업중단으로 인한 생산차질 발생을 최소화
  - 개별 근로자의 소극적 단결권인 조직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 
확보하기 위해 유니온숍 규정을 삭제
  - 현재 세계 최다 수준인 노조전임자의 수를 합리적으로 제한

#### ⑤ 자유로운 근로계약 체결 권한 강화

-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고용계약  
체결시 고용계약기간을 3년이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개선
  - 근로계약 체결시 서면방식주의의 도입 및 근로감독 기능 강화
  - 비정규직을 위한 중간노동시장(임시직, 계약직, 파트타임,  
파견근로 등)을 더욱 활성화

## 4. 성장동력 발굴·육성

□ 국제경쟁력을 갖춘 10개의 성장산업을 발굴·육성

- 2만불 달성 OECD국가의 산업구조와 메가 트렌드,  
유망성, 한국의 강점 등을 종합하여 성장동력을 발굴
- 정밀화학과 산업용기계는 현재 한국에 강점이 없지만  
해외기업 유치와 기술개발로 Catch-up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

10대 성장동력별 비전

| 품 목     | 부가가치액(兆원) |       | 생산액(兆원) |       |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|
|         | 02년       | 10년   | 02년     | 10년   | 연평균증가율 |
| 자동차     | 24.3      | 35.6  | 67.8    | 99.1  | 4.8    |
| 반도체     | 11.9      | 27.0  | 17.3    | 39.1  | 10.7   |
| 휴대정보단말  | 9.5       | 17.4  | 23.8    | 43.7  | 7.9    |
| 디스플레이   | 5.5       | 15.0  | 9.0     | 24.4  | 13.3   |
| 바이오     | 4.2       | 12.2  | 6.8     | 20.1  | 14.4   |
| 정밀화학    | 7.1       | 15.6  | 14.8    | 32.6  | 10.4   |
| 산업용기계   | 21.4      | 38.3  | 48.0    | 85.9  | 7.5    |
| 통신서비스   | 15.0      | 28.9  | 32.0    | 61.5  | 8.5    |
| 디지털 콘텐츠 | 2.2       | 8.2   | 3.7     | 13.9  | 17.9   |
| 비즈니스서비스 | 18.2      | 36.3  | 34.3    | 68.3  | 9.0    |
| 계       | 119.4     | 234.4 | 257.6   | 488.6 | -      |

□ 새로운 핵심역량 배양과 기존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

7대 산업전략을 구사

- 2만불 달성을 위해 기존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 
산업의 메가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핵심역량을 개발

## 실천과제

### ① 제조업의 +0.5차화

- 물건의 제조·판매에 그치던 사업전략에 서비스와 지식을 더하여  
부가가치화 달성을 촉진
  - 제조업이 제조업에 머무르지 않고 고객이 원하는  
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을 지원
  - 업체간 업무제휴를 촉진하고 인수·합병의 규제를 완화
  - 해외 기업의 국내시장 유치를 통하여 소프트화 경영기법의  
전파를 유도

### ② 핵심부품·기술의 국산화 - Korea Inside

- 모듈화 관련 국제 표준활동 강화
  - 홈 네트워크 등 국제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 
모듈화의 디자인 규칙을 주도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
  - 단품을 기능단위로 통합한 것이 모듈부품
- 국내 부품업체와의 공동 R&D활동을 지원하고 규모의 경제실현을  
위한 대형화·전문화 유도

### ③ 서비스 산업 육성

- 서비스산업을 성장동력과 관련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주는  
주요 경쟁기반산업으로 인식

- 대내외 투자를 촉진하고 지식 집약적인 서비스산업의 기술개발을 첨단기술개발로 간주하여 동일한 혜택을 제공
- 서비스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
  - 제조업과 같은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금융여건을 개선
  - 경쟁력이 부족한 서비스부문의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

#### ④ IT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

- ☐ IT기술을 여타 산업과 접목시키고 산업 및 기술간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
  - 텔레매틱스(IT+자동차), 디지털 콘텐츠(IT+콘텐츠), BIT(BT+IT) 등

#### ⑤ 산업의 융복합화

- ☐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이업종간 지식·기술교류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
  - 여러 업종에 걸친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

#### ⑥ 산업클러스터 조성

- ☐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
  - 국가차원의 산업 클러스터 지도를 작성하고 스타 클러스터를 시범 육성

## 5. 중소기업 활성화

- 중소기업의 자생력이 강화될 때 기업생태계 전체의 경쟁력 제고로 산업의 고부가가치가 가능
  - 현재 국내 중소기업은 가동률 급락, 폐업·해외이전 등 위기국면
  -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열위

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

| 종합   | 제품설계 | 소재관련 | 부품관련 | 조립가공 | 공정관리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80.6 | 80.6 | 82.0 | 83.3 | 80.0 | 79.4 |

주 : 일본=100

자료 : 전경련, 2003

- 선진국은 확고한 중소기업 정책 기조를 가지고 중소기업을 육성
  - 이케다 수상은 소득배증계획 추진시 중소기업기본법(63년)을 제정, 보호 위주에서 경쟁력 강화로 정책 전환
  - 이스라엘은 90년부터 하이테크 중심의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, 전국의 실리콘밸리화 추진

### 실천과제

#### ① 정보·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지원

-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·인력·기술 지원을 강화
  - 소득공제 확대, 주택보급 우대 등 중소기업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

- 대학과 출연연구소 평가시 중소기업 지원 노력과 성과를 반영
- 파격적 창업 서비스 제공
  - 네덜란드는 창업허가제를 아예 폐지했으며, 스웨덴은 연중무휴 행정서비스 제공

## ② 자율경쟁 및 구조조정 촉진

-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성장의 파트너로 육성
  -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되,  
경쟁력 없는 기업 및 사양산업의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
  - 고유업종제도, 단체수의계약 등 일방적 보호에서 자금·인력 지원, 창업활성화 등 경쟁력 지원 정책으로 전환
- 중소기업의 사업교환과 인수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및 세금 감면을 실시

## ③ 지역 중심의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성

- 「지역 중소기업 혁신 클러스터」를 지정 및 조성
  - 지방의 중소기업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산·학·연 연계를 강화
  - 개별 업체의 지원보다는 중소기업 집단화를 촉진하고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강화
  - 지역 대학 및 연구소의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강화

□ 지방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역 「중소기업 혁신클러스터」  
형성에 집중 투입

- 개별 업체의 구조개선이나 경영안정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되,  
클러스터 형성에 적합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

#### ④ 대기업-중소기업 동반 발전

□ 대기업은 경쟁과 전방위 지원을 병행

- 대기업은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별하고  
선별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육성
  -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참여,  
설비구매지원, 기술공여 및 공동개발, 구매 등을 전폭 지원
- 또한 납품단가 적정화, 발주 안정화, 납품대금 결제조건 개선

□ 기존의 대·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, 대기업에 대해  
중소기업과의 협력 인센티브를 부여

-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참여를 확대하고 자회사 제도를  
활성화
  - 일본은 모기업의 자본 참여 비중이 11.6% (한국 1.9%)

## 6. 인적자원 육성

□ 소수의 고급인력이 생산성 향상 및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시대

- 한국의 고급인력 경쟁력이 선진국 대비 크게 낮은 수준
- 특히 고급인력의 해외유출(Brain Drain)이 심화

한국의 인재경쟁력 현황(IMD, 2003)

| 항 목 | 기술인력 | 금융인력 | 경영자 | 해외인력 유치 |
|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---|
| 순 위 | 20위  | 22위  | 22위 | 16위     |

주: 인구 2천만 이상 30개국 중 순위

□ 선진국은 핵심경쟁요소인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국가역량을 총동원(War for Talent)

- 미국은 전문인 직업비자인 H1B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전세계 고급 두뇌를 유치
- 프랑스는 미국 유학생을 귀국시키기 위해 97년 이후 7,000개의 연구교수직 신설
- 독일은 2000년 ‘그린 카드’제도를 통해 동유럽 등으로부터 2만 명의 고급인력 유치

### 실천과제

#### ① 동북아 인재허브 지향

□ 각 분야에서 국가경제를 견인할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주변국 고급인력을 유인하는 동북아 인재 허브를 지향

- 우수인력의 유출방지 및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노력 가속화
- 해외 한국인 석학의 유치 및 공동연구 등 네트워크 구축
- 또한 러시아·동구권의 과학기술 인력을 적극 유치

## ② 고급 여성인력 경제활동 참가 확대

□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에 수반되는 비용을 사회가 부담

- 단계적으로 국가재정 부담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우 탁아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

□ 여성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신분야를 육성

- 여성이 경쟁력을 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부가 직종을 개발 및 확대

## ③ 개방형 관료 임용 확대

□ 철저한 직무분석과 평가방식 개선을 통해

공무원 개방형 임용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대책을 강구

- 5급 이하 중하위직까지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하되 철저한 직무분석을 도입,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
-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인사권을 보장

#### ④ 시장가치 위주의 성과주의 보상시스템 구축

- 경영자의 경우 경영성과, 연구개발인력의 경우 기술개발 성과에 따른 실적 위주의 보상관행 정착 유도
  - 기업 R&D인력의 경우 제품 및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의 일정부분을 보상하는 관행 정착
  - 기업경영자도 이익에 따른 보너스, 스톡옵션 등을 통해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설계

#### ⑤ 수월성 위주의 교육개혁 추구

- 학력 중시의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 학교에게 책임을 부과
  -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사들의 질 제고, 교원당 학생수 감소 및 학교시설 고급화 추진
-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을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
  - 미국에는 Charter School, 영국의 경우 국고운영학교(Grant-Maintained School)등에서 수월성 위주의 교육을 수행

#### ⑥ 전문대학원 체제 구축

- 경영·법학·의학 분야에서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되 학부수준에서는 학제간 전공 교류의 범위를 확대
  - 기존 대학원과 차별화를 통해 고급전문인력을 양성

## 7. 경제특구 조성

- 세계 초일류기업을 유치하고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특구를 조성, 만불 장벽의 돌파구를 마련
  -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허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필요
  - 중국, 싱가포르, 홍콩은 경제특구를 조성해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사를 다수 유치
    - 중국 포둥 27개, 싱가포르 220개, 홍콩 944개, 한국 2개
- 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의 중심을 지향
  - 단순한 물류·금융 허브가 아니라 지식기반 경제에 부합하는 지식·R&D 허브를 지향

한국의 바람직한 경제특구의 모습



## 실천과제

### ① 경제자유구역법 개정과 추진체계 구축

#### ☐ 지식 R&D형 경제특구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

-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확보외에 R&D센터가 개발한 기술이나 각종 지식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확실히 보장

#### ☐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역할 분담 등을 조기에 착수

- 중앙 정부의 「경제자유구역위원회」, 「경제자유구역기획단」과 지자체간의 역할분담과 마케팅 능력을 제고

### ② 수도권 경제특구 확대 지정

#### ☐ 3억평 규모의 수도권 경제특구 건설

- 현재 지정된 인천지역 외에 수도권 지역 내에 총 3억평 규모로 지정
- 1단계: 2010년까지 1억 1천만평 규모의 특구를 지정 및 개발
- 2단계: 경제특구내 첨단산업 집적화를 본격적으로 구축
  - 2011~2020년까지 1억 1천만평 개발
- 3단계: 개성~수도권에 이르는 동북아 최대 첨단산업기지 완성
  - 2021~2030년까지 8천만평 개발

### ③ FTA의 전략적 활용과 국가간 협력체제 구축

#### □ FTA의 전략적 활용과 경쟁국가들간의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

- 한중일 3국간 FTA 결성을 통해 외국 기업들의 중국 및 일본 시장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로 활용하도록 유도
- 한중일 경제특구간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동북아 3각 벨트 (triangle) 구축
  - 일본 및 중국 경제특구들과의 절대적 우위 확보를 위한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

### ④ 다국적 기업 CEO로 구성되는 자문단 구성

#### □ 다국적기업 CEO로 구성되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구성

- 세계의 일류 IT 기업의 CEO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경제특구의 발전을 위한 의견 청취
  - 대통령이 직접 특구 운영 의견 수렴
- 동시에 이들 다국적 기업이 경제특구에 투자를 하도록 권유

### ⑤ 경제특구의 단계적 확대

#### □ 기존의 산업단지, 외국인투자 지역 등을 경제특구 체제로 변경

- 수도권 경제특구의 성공경험을 지방산업단지 등에 확산
- 궁극적으로 경제특구 시스템을 국토 전체에 적용하여 개방형 국가 시스템으로 전환

## 8. 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

□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기업 수는 미미

- 포천誌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한국기업은 13개
  - 상사 4개, 금융회사 2개, 정부출자기업 2개 포함
- 매출액과 총자산수익률(ROA: Return on Asset)을 기준으로 각각 100위 이내에 드는 기업은 삼성전자 한 개뿐
  - 매출 기준 59위(476억 달러), 수익률 기준 29위(13.3%)
  - 200위 기준으로도 국내기업은 단 2개(삼성전자, 현대자동차)

국내외 주요기업의 매출규모와 수익성



□ 업종별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(Global Most Admired) 기업 10개의 육성을 위해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

- 단순히 양적 경영성과만이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質 중심의 가치경영을 추구할 필요

## 실천과제

### ① 선택과 집종의 구조조정

- 고수익 사업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위해 선택과 집종의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
  - 핵심역량에서 벗어난 무리한 사업확장을 경계하고, 저수익 혹은 비관련 사업에서 과감하게 철수
  - 세계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'전략사업 군'을 형성하고, 자원의 집중 투입을 유도

### ② 글로벌 최적화 구현

- 선별적 해외시장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통해 글로벌 역량 극대화
  - 지역별, 국가별로 위기/기회 포트폴리오 작성
  - 위험분산과 글로벌 수용에 대한 신축적 대응을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적절히 활용
- 해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글로벌 시장의 진출 교두보로 활용
  - 세계유수의 기업과 정보 및 시스템 공유를 위한 국경간 제휴를 적극 추진

국가별 국경간 전략적 제휴건수

| 국가 | 미국     | 일본    | 영국    | 캐나다   | 독일    | 프랑스   | 네덜란드  | 한국    | 이태리   |
|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건수 | 22,293 | 9,430 | 5,966 | 4,064 | 4,602 | 3,245 | 1,604 | 1,566 | 1,566 |

자료 : OECD (2001.6.27)

### ③ 제품의 고부가화로 세계 1등제품 200개 창출

- 미래의 산업구도를 예측하고 기술표준 주도과 니치마켓 공략을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를 단행
  -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하는 도메인적 발상을 통하여 고부가 신사업을 창출
  -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조직 내부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추진 체계 구축

### ④ 사회적 리더십 발휘/사회친화 경영

- 기업시민으로서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기업이미지 제고
  - 수동적 의미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건전한 기업시민으로의 위상 확립
  -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이나 기타 인프라가 상업적 목적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 목적을 위해 쓰이도록 노력
    - IBM은 보유기술을 활용한 '현물지원' 형태의 활동을 실시, 세계 문화재 복원 등 'e-Culture' 프로젝트 개시
- 윤리경영을 조직내에 체화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확보
  - 기업의 윤리경영은 선택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의 필수조건
  - 윤리강령의 작성 및 준수, 윤리교육, 임직원 평가에 있어서 윤리성 비중을 증대

## <전제조건>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

- 북한의 핵 위협, 불안정한 정전체제 지속 등이  
고도성장의 치명적 제약요인으로 작용
  -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막대한 인적·물적 자원의 소모,  
컨츄리 리스크 증대 등을 감수
-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북한의 시장체제 진입을  
지원함으로써 근본적 위험요인을 제거
  -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을 통해 경쟁국과 대등한 입지를  
확보하고,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
- 북핵 위기의 조속한 해소 및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을 위한  
단계적 조치를 추진
  - 대북정책 이견에서 비롯된 한미간 갈등을 조기에 봉합하고  
보다 긴밀한 외교 공조체제를 구축
  - 강대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의 현실을 수용하고 보다 지혜롭게  
대응할 필요
  - 북한의 시장체제 전환 및 국제사회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
  - 남한 단독의 대북지원 시스템에서 벗어나 북한의 경제개발을  
위한 국제적 협조시스템 구축
  - 다자회담의 틀을 활용하여 한반도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 
평화협정으로 전환
  - 한반도의 영구 평화를 대내외에 선포

## V. 추진 일정

### 1. 부처별 업무 분장

(●: 주무부처, ○: 관련부처)

|                 | 국가<br>리더십  | 기업<br>활력 | 노사<br>관계 | 성장<br>동력 | 중소<br>기업 | 인적<br>자원 | 경제<br>특구 | 한반도<br>평화 | 글로벌<br>역량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이만불 달성 추진회의(신설) | 총괄 기획 및 조정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대통령 (청와대)       | ●          | ○        | ○        | ○        | ○        | ○        | ○        | ○         | 민간<br>부문  |
| 재정경제부           | ○          | ●        |          | ○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| ●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교육인적자원부         |   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●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통일부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○        | ●         |           |
| 외교통상부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○        | ○        | ●         |           |
| 행정자치부           | ○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과학기술부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○        | ○        | ○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문화관광부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●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산업자원부           |   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| ●        | ●        | 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정보통신부           |   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| ●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보건복지부           | ○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노동부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●        | 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여성부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건설교통부           |   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공정거래위원회         |            | ●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국정홍보처           | ○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중앙인사위원회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○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| 부패방지위원회         | ○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|

## 2. 부처별 추진 로드맵

| 구분           |           | 단기 (2004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장기 (2005~20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통령<br>(청와대) | 국가<br>리더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만불 달성을 국정 최우선 목표로 설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공</li> </ul> </li> <li>• 이만불 달성 추진회의와 공조 하에 마스터플랜 작성</li> <li>• 원칙에 입각한 현안 처리<br/>(노사분규, 새만금, 핵폐기장 등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만불 달성 추진 상황의 상시 점검 및 미비점 보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책 일관성 유지</li> </ul> </li> <li>• 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분쟁조정법 제정</li> <li>- 사회갈등 조정 위원회 설치</li> </ul> </li> </ul> |
| 재정<br>경제부    | 국가<br>리더십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조세 개편을 통한 중산층의 근로 의욕 고취</li> <li>• 간접세 위주의 조세체계를 직접세 위주로 전환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기업<br>활력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규제법률 구조의 네거티브시스템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채비율 200% 원점에서 재검토</li> </ul> </li> <li>•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</li> <li>• 글로벌 스탠다드에 위배되는 과잉 규제 정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결합재무제표, 이사회 운영 등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법인세율 인하</li> <li>• 사외이사 제도의 보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주주 및 최고경영자의 사외 이사 추천 및 선임 제한 완화</li> <li>- 사외이사 Pool의 확충</li> </ul> </li> <li>• 경영자 배상책임에 대한 합리적 보완책 강구</li> <li>• 친기업적 사회분위기 조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성장<br>동력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IT 접목 및 융복합화 촉진을 위해 M&amp;A 규제 완화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중소<br>기업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창업 최저요건 완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식회사 자본금 하한 조정 등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경제<br>특구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식·R&amp;D형 특구를 지향</li> <li>- 국내기업 역차별, 노사관계 특례, 등의 내용을 중점 보완</li> </ul> </li> <li>• 수도권 경제특구의 확대 지정</li> <li>• 특구개발 및 운영 전담조직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칭 경제특구 개발청</li> </ul> </li> <li>• 다국적 기업 CEO로 구성되는 대통령 자문위원회 구성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인프라 개발 및 특구 건설 상황 수시 점검, 미비점 보완</li> <li>•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기관 유치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분              |           | 단기 (2004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장기 (2005~20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교육<br>인적<br>자원부 | 기업<br>활력  | · 기업의 경제, 사회적 역할에 대한<br>교육 프로그램 도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인적<br>자원  | · 주변국 고급인력 확보 방안 수립<br>- 이민조건 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<br>· 해외거주 한인 고급인력 네트워크<br>구축<br>- 해외인력의 국내 회귀 및 국내<br>인력과의 연계 | · 수월성 위주의 교육 개혁 추진<br>- 자립형 사립고 확대<br>- 국가 차원의 영재관리시스템 구축<br>· 경영·법학·의학 등 전문대학원<br>설립 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특구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국내외 대학 및 외국인 학교 유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통일부             | 경제<br>특구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개성 특구과의 연계 방안 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한반도<br>평화 | · 한미일 3국 정책 공조 강화<br>· 북한경제 개발을 위한 국제적<br>협조 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북한경제 개발을 이끌 자체인력<br>양성 프로그램 가동<br>· 정부 차원의 대북 장기 차관 제공<br>·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<br>·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대내외에<br>선포하는 울릉도 선언 추진<br>· 한반도상황에 적합한 통일방안 모색 |
| 외교<br>통상부       | 인적<br>자원  | · 해외석학 유치 및 활용을 위한<br>네트워크 구축<br>- 해외공관을 활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경제<br>특구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한중일 3국간 FTA를 추진하여<br>특구개발에 전략적으로 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| 한반도<br>평화 | · 다양한 채널의 대미 로비 확대<br>· 한미일 3국 정책 공조 강화<br>· 북한경제 개발을 위한 국제적<br>협조 시스템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분        |           | 단기 (2004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장기 (2005~20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행정<br>자치부 | 국가<br>리더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봉사하는 공직자상 정립</li> <li>• 관공서 문턱 낮추기 운동 전개</li> <li>• 이만불 목표를 반영한 정부조직 재설계</li> </ul>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인적<br>자원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개방형 관료 충원 체제 구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과학<br>기술부 | 성장<br>동력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반기술 연구</li> <li>• 클러스터 내 산관학 협력체제 구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중소<br>기업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소기업 기술지원 전문가 양성, 활용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인적<br>자원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이공계 기피 극복 방안 수립</li> <li>• 외국인 및 재외 한인 기술인력 확보 방안 수립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경제<br>특구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국내외 첨단 연구센터 유치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문화<br>관광부 | 성장<br>동력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차세대 성장동력 선정 및 발전 마스터플랜 제시 (컨텐츠 부문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보<br>통신부 | 기업<br>활력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규제법률 구조의 네거티브시스템화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성장<br>동력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차세대 성장동력 선정 및 발전 마스터플랜 제시</li> <li>• 제조업체의 E-Business 활성화 지원</li> <li>- 정보화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융·복합화 촉진을 위해 이업종간 교류회 운영</li> <li>• 융·복합형 국책사업 추진</li> <li>• 산업클러스터 조성</li> </ul> |

| 구분        |           | 단기 (2004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장기 (2005~20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산업<br>자원부 | 기업<br>활력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규제법률 구조의 네커티브시스템화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성장<br>동력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차세대 성장동력 선정 및 발전 마스터플랜 제시</li> <li>제조업체의 E-Business 활성화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보화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</li> </ul> </li> <li>서비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창업, 기술개발 등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한 지원 제공</li> </ul> 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 유도</li> <li>융·복합화 촉진을 위해 이업종간 교류회 운영</li> <li>융·복합형 국책사업 추진</li> <li>산업클러스터 조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중소<br>기업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책자금 및 수출 지원 제도 개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책금융에 메리트시스템 도입</li> </ul> </li> <li>창업지원 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창업관련 교육 활성화, 창업지원 원스톱 서비스, 기술신용보증 확대 등</li> </ul> </li> <li>신기술, 하이테크 위주로 벤처기업 재지정</li> </ul>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유업종지정제도 등</li> </ul> </li> <li>신기술 제품의 시장 진입 장벽 제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기술의 경우 납품·시공실적의 배점 비율을 최소화</li> </ul> </li> <li>지역 중소기업혁신 클러스터 조성</li> <li>산업기반 취약 지역의 '향토지적 재산권' 활성화</li> </ul> |
| 보건<br>복지부 | 국가<br>리더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마스터 플랜 작성</li> <li>부처별로 산재된 실업, 빈곤, 복지 프로그램을 재정비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분    |      | 단기 (2004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장기 (2005~20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노동부   | 노사관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노사정위원회의 실행력 확보</li> <li>• 한국형 '신사회협약' 채택 추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고통분담과 무분규선언</li> </ul> </li> <li>• 엄격한 법집행으로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노사관계 정착</li> <li>• 노동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</li> <li>• 노사관계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, 쟁의요건의 강화 등</li> </ul> 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한국형 경영참가 모델 정립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경영권과 노동권의 상호 존중</li> <li>- 노사협의회를 통한 참가 활성화</li> </ul> </li> <li>•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보호가 전제</li> </ul> </li> </ul> |
|       | 중소기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중소기업 인력 공급 대책 수립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조기 제정</li> <li>- 중소기업 취업 인력 우대 방안</li> <li>- 고급인력의 취업촉진</li> <li>- 외국인 활용 증대를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보완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특구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경제 특구 내 노동특례 적용 방안 수립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여성부   | 인적자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지원 대책 수립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부, 기업, 당사자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방안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여성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신분야를 육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여성의 감각과 소프트 역량을 요구하는 분야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건설교통부 | 기업활력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 관련 규제 완화 및 규제법률 구조의 네거티브시스템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도권 공장총량제한 완화 등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| 경제특구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특구 조성 및 인프라 확충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구분              |           | 단기 (2004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장기 (2005~20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정거래<br>위원회     | 기업<br>활력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제력 집중 정책의 재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출자총액 제한 폐지</li> <li>공정거래법의 경쟁 촉진 중심 개편</li> <li>내부거래 조사는 경쟁제한 행위가 있을 때에만 실시토록 한정</li> </ul> </li> <li>기업의 조직 선택에 대한 자율권 부여</li> <li>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</li> </ul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정<br>홍보처       | 국가<br>리더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민계도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각종 매체를 활용한 경제 교육</li> <li>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캠페인</li> </ul> </li> <li>국정 홍보 기능 강화 및 관련 조직 효율화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</li> <li>전략적 국가 마케팅 활동 강화</li> </ul> |
| 중앙<br>인사<br>위원회 | 인적<br>자원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방형 관료 충원 체제 구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공계 인력 및 민간 전문가 임용 확대</li> </ul> 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부패방지<br>위원회     | 국가<br>리더십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회도덕성 회복 운동 전개</li> <li>부패방지법 보완</li> <li>부문별 윤리헌장 제정 및 실천 독려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3. 心得 事項

- 2만불 선포 및 알기 쉬운 수치 목표를 제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협력과 분발을 호소
  - 2만불 사회의 모습에 대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‘삶의 질’ 지표 제시
    - 월급 2배 등 소득지표는 물론, 교육환경, 여가 등 생활환경, 사회보장 등
    -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, 수출 증대, 투자액 등 구체적인 과정목표를 제시
  - 대통령이 기업, 언론, 시민단체, 종교단체, 노조 등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와 면담을 통해 비전을 전파하고 2만불 운동에의 동참을 호소
    - 대치는 저녁 식사, 티타임 등에 반대파를 초대하여 1:1 설득
- 앞서 간 국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벤치마킹을 통해 국가적 학습을 유도
  - 공무원, 학계, 언론, 시민단체, 노조 등으로부터 오피니언 리더들을 선발, 2만불 진입에 성공한 국가와 실패한 국가에 대해 현장 벤치마킹 실시
    - 강대국(미, 일, 영, 독), 강소국(아일랜드, 핀란드, 스웨덴, 네덜란드), 중화권(중국, 홍콩, 싱가포르), 남미(브라질, 아르헨티나) 등
  - 벤치마킹을 통해 공직사회, 사회지도층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2만불 달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

## I. 한국의 현상황 · 2

1. 잃어버린 8년 · 2
2. 선진국 진입 착시 현상으로 미래가 불투명 · 4

## II. 2만불의 의미 · 7

1. 마의 만불은 세계 공통 현상 · 7
2. 2만불의 의미 · 8
3. 선진국의 2만불 돌파 비결 · 14

## III. 돌파 전략 · 16

1. 戰略 目標: 2010년 2만불 달성을 위한 선택 · 17
2. 戰略 方向: Global 10-10의 육성 · 22

## IV. 8대 추진과제 · 27

1. 국가리더십 발휘 · 28
  2. 기업활력 제고 · 32
  3.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· 35
  4. 성장동력 발굴·육성 · 38
  5. 중소기업 활성화 · 41
  6. 인적자원 육성 · 44
  7. 경제특구 조성 · 47
  8. 기업의 글로벌 역량 제고 · 50
- 전제조건: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 · 53

## V. 추진 일정 · 54

1. 부처별 업무 분장 · 54
2. 부처별 추진 로드맵 · 55
3. 心得 事項 · 61

## I. 국제정세 · 세계경제 · 63

1. 유일한 강대국으로서 미국 위상 공고화 · 63
2. 準강대국의 재편과 블록(block)화 · 66
3.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한반도 주변정세 · 69
4. 에너지 및 환경문제의 대두 · 72

## II. 산업·기술 · 76

1. 국제 경쟁(Global Mega Competition)의 심화 · 76
2. 디지털화의 진전 · 79
3. 미래 유망산업으로 바이오가 각광 · 83
4. 무형자산의 시대 · 85
5. 인본주의 경향 강화 · 88

## III. 사회·문화 · 91

1. '삶의 질' 중시 · 91
2. 부의 양극화 심화 · 94
3. 문화적 다양성 확산 · 96
4. 고령화 사회 도래 · 98
5. 감성이 키워드로 부상 · 100

## 2

### 한국의 잠재성장력 현황 · 102

#### I. 한국의 현상항과 미래 성장잠재력 · 103

1. 한국의 현상항 · 103
2.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 · 107

#### II. 시나리오별 2만불 달성 시기 · 110

1. 현상유지형 : 연평균 4.0% 성장 · 110
2. 확대성장형 : 연평균 6.5% 성장 · 113
3. 축소균형불안형 : 연평균 3.4% 성장 · 115
4. 침체·파탄형 : 연평균 1.0% 성장 · 117

#### III. 현상유지형과 확대성장형의 비교 및 시사점 · 119

1. 이만불 달성은 「투자주도」 속에 「수출」 뒷받침 필요 · 119
2. 1만불은 정체와 도약의 분기점 · 120

## 3

### 지속적 성장의 필요성 · 122

#### I. 소득분배 개선 · 123

1. 성장을 통해 분배를 개선해온 한국 · 123
2. 성장친화적 정책: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중요 · 125
3. 복구식 복지국가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시기상조 · 126

#### II. 국가채무 상환 부담의 완화 · 127

1. 안정적 기조를 회복한 정부재정 · 127
2. 국가채무 부담이 단기간에 급증 · 128
3. 국가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 · 129

### Ⅲ. 고령화에 대비 · 131

1. 급속한 고령화 진행 · 131
2. 부양 부담 가중과 경제성장 둔화 · 132
3. 고령인구 부양을 위한 성장의 필요성 · 133

## II. 한국적 GMA의 모색 · 199

1. 한국적 글로벌 존경받는 기업(GMA) · 199
2. 2만불 한국의 필요조건 · 201

## III. 한국의 비전: GMA 10 · 209

1. 국내 대표기업의 글로벌 위상 · 209
2. 글로벌 초우량기업을 통해 바라본 2만달러 시대 · 211

## IV. 제언 · 220

1. 진취적인 기업가정신(entrepreneurship) 양양 · 220
2. 경제주체들의 상생적, 미래 지향적인 인식 전환 · 221

## 별첨.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· 223

|   |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|
| 2 | 8대 추진 과제       |
| 1 | 국가리더십 발휘 · 226 |

### I. 국가리더십의 현 상황 · 228

### II. 해외사례 · 234

1. 영국의 대처수상 · 235
2. 일본의 이케다 수상 · 236
3. 독일의 아데나워 수상 · 238
4. 네덜란드의 타협과 합의의 정치문화 · 239
5. 아일랜드의 대타협 · 241
6. 아르헨티나 페론 대통령 · 243

### III. 2만불 시대 국정환경 · 245

1. 정책운영의 분권화 · 245
2. 정책경쟁시대 돌입 · 246
3. 행정의 전문화 · 247

### IV. 비전 및 지향점 · 249

1. 국정운영 비전 : 일류 정치행정(First rate government) · 249
2. 구체적 지향점 : 4대 전략초점에 집중하여 국가발전 견인 · 251

### V. 실천과제 · 257

1. 국가비전 제시와 국민 공감대 형성 · 257
2. 현안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정면 돌파 · 258
3. 갈등조정시스템 구축 · 260
4. 지도층의 솔선으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 · 261
5. 사회안전망 보강과 중산층 육성 · 263
6. 정부혁신과 행정역량 강화 · 264

## I. 기업환경의 현 상황 · 268

1. 투자 부진과 기업 활력 저하 · 268
2. 기업 활력 저하의 원인 · 269

## II. 해외사례 · 273

## III. 환경 분석 · 278

1. 기업의 경쟁우위 원천 변화 · 278
2. 국제 경쟁의 격화 · 279
3. 국별 기업 유치 경쟁 가속 · 280

## IV. 비전 및 지향점 · 281

## V. 실천과제 · 284

1.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· 284
2.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관련 제도 설계 · 289
3. 대기업 그룹의 Up-Grade를 위한 제도 정비 · 292
4. 친기업적 사회 분위기 조성 · 293

## I. 노사관계의 현 상황 · 297

## II. 해외사례 · 300

1. 개황 · 300
2. 국민소득 증가와 노사관계 변화 · 301
3. 사회협약 추진사례 · 311
4. 국가별 경영참가모델 비교 · 316
5. 시사점 · 318

## III. 비전 및 지향점 · 321

1. 비전 : 노사관계의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 · 321
2. 지향점 : 미래지향적인 相生의 노사관계 정착 · 322

## IV. 실천과제 · 323

1. 국민소득 배증을 위한 한국형 「新社會協約」 채택 · 323
2. 법과 원칙이 적용되는 노사관계를 조기 정착 · 325
3. 한국형 經營參加모델의 조기 정립 · 327
4. 노사관계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· 328
5. 자유로운 근로계약 체결권한의 강화 · 329

**별첨 1. 외국의 사회협약 추진사례 · 331**

1. 개요 · 332
2. 성공적인 사회협약을 유지한 국가들 · 332
3. 사회협약에 실패한 국가들 · 342
4. 사회협약의 성공과 실패 요인 · 346
5. 한국에 대한 시사점 · 348

**별첨 2. 외국의 경영참가모델 · 349**

1. 스웨덴 · 350
2. 독일 · 353
3. 프랑스 · 360
4. 영국 · 361
5. 일본 · 362
6. 한국 · 365
7. 시사점 · 370

**4**

**성장동력 발굴·육성 · 372**

**I. 비전 및 지향점 · 374**

**II.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 · 376**

1. 제조업의 +0.5차화 · 377
2. 핵심 부품·기술의 국산화 - Korea Inside · 379
3. Second Catch-up 전략 · 381
4. 서비스산업 육성 · 383
5. IT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 - 지렛대 전략 · 385
6. 산업의 융·복합화 · 387
7. 산업 클러스터 조성 · 388

**III. 10대 성장동력별 발전전략 · 391**

**별첨. OECD국가의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와 기여도 · 410**

**5**

**중소기업 활성화 · 418**

**I. 중소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· 420**

1. 중소기업 현황 · 420
2. 중소기업의 문제점 · 424

**II. 주요국의 중소기업 정책 · 428**

1. 미국 · 428
2. 독일 · 432

3. 이스라엘 · 434
4. 일본 · 436

### III. 중소기업 육성 비전 및 전략 · 440

1. 2만불 시대 중소기업의 비전 · 440
2. 중소기업 육성 전략의 전환 · 441

### IV. 실천과제 · 443

1. 서비스·정보 제공과 인프라 구축 · 443
2. 자율경쟁 및 구조조정 촉진 · 452
3. 지역 중심의 클러스터 조성 · 455
4. 대기업-중소기업 동반 발전 · 458

### 별첨 1. 일본 중소기업 정책의 변천 · 460

### 별첨 2. 국별 중소기업 정책 비교 · 470

1. 금융, 세제 분야 · 470
2. 진흥정책 · 472
3. 경영지도, 정보제공 · 475

### 별첨 3. 일본의 21세기 중소기업의 정책이념과 목표 · 476

## 6

### 인적자원 육성 · 479

### I. 한국의 인재경쟁력 현황 · 481

1. 분야별 고급인력 부족 · 481
2. 고급인력의 수급 불일치 및 활용 수준 열위 · 485
3. 교육의 질적 수준 미흡 · 488
4. 고급인력에 대한 합리적 보상시스템 결여 · 490

### II. 선진국의 교육개혁 사례 · 494

1. 美國의 교육개혁 - 英才教育 본격화 · 495
2. 영국의 교육개혁 -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· 496
3. 일본의 교육개혁 - ‘여유있는 교육’ vs ‘학력증진’ 논란 · 498
4. 뉴질랜드의 교육개혁 - 교육부 폐지 및 시장원리 전격 도입 · 499
5. 프랑스 국립행정학교(ENA) 개혁 · 504

### III. 환경분석 · 503

### IV. 국가인재 비전 · 505

1. 국가인재 양성 비전 - 동북아 인재Hub 지향 · 505
2. 국가인재 양성 전략 · 506

## V. 실천과제 · 508

1. 단기과제 · 508
2. 중장기 과제 · 515

## 7

### 경제특구 활성화 · 521

#### I. 한국의 현 상황 · 523

1. 산업 공동화 심화 : 제조업 기반의 붕괴 우려 · 523
2. 경제특구의 미래 불투명 · 525
3. 신 개념의 경제특구가 필요 · 529

#### II. 환경 분석 · 530

1.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 : 한·중·일간의 경쟁 · 530
2. 중국, 싱가포르의 허브 선점 노력 · 533

#### III. 해외 사례 · 538

1. 주요 경제특구의 비교 · 538
2. 시사점 · 540

#### IV. 비전 및 지향점 · 541

#### V. 실천과제 · 547

1. 경제자유구역법의 개정과 추진체계 구축 · 547
2. 수도권 경제특구의 확대 지정 · 550
3. 특구 개발 및 운영 전담조직 신설 · 554
4. 경제특구의 단계적 확대 · 556

#### 별첨 1. 동북아 허브 경쟁 도시들간의 비교 · 557

1. 물류 허브로서의 비교 분석 · 557
2. 금융 허브로서의 비교 분석 · 561
3. 지식기반 허브로서의 비교 분석 · 564
4. 동북아 허브로서의 가능성 · 567

#### 별첨 2. 싱가포르의 발전과정과 허브전략 · 571

1. 산업구조 · 571
2. 싱가포르의 허브정책 : 제조생산지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· 573

## 8

### 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 · 576

#### I. 기업경쟁력의 현 상황 · 578

1. 한국 대표기업의 취약한 글로벌 경쟁력 · 578

2. 기업경쟁력은 국가경쟁력에 직결 · 580
3. 글로벌 기업이 2만불 국가 실현의 견인차 · 581

## II. 해외사례 · 582

1. 구조조정을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 · 583
2. 미래 신성장엔진을 적극 발굴 · 584
3. 사업의 고부가화를 지향 · 585
4. 범 세계적 사업구조의 구축 · 586
5. 네트워킹 확보에 주력 · 587
6. 앞서가는 윤리경영을 실천 · 588

## III. 비전 및 지향점 · 589

1. 2만불 시대 기업환경 · 590
2. 한국기업 비전 : GMA 10(Global Most Admired 10) · 594
3. 구체적 지향점 : 3대 혁신과 신뢰경영 · 596

## IV. 실천과제 · 598

1. 경영효율성 배가 · 598
2. 글로벌 비중 2배 확대 · 603
3. 세계 1등 제품 200개 · 607
4. 글로벌 기업신뢰도 Top 10 · 614

## 전제조건

한반도 평화체제 확립 · 618

## I. 남북관계의 현 상황 · 619

1. 불안정한 북한체제 · 619
2. 안보불안 상존 · 620
3. 분단에 따른 과다한 기회비용(Opportunity Cost) · 621

## II. 비전 및 지향점 · 623

1. 평화체제가 확립된 대륙 국가 · 623
2. 경쟁국들과 동등한 여건 확보 · 624
3.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 극대화 · 625

## III. 실천과제 · 626

1. 당면과제 · 626
2. 중장기 과제 · 629

## 3

## 국가 리더십 사례

## 1

日本 이케다 수상의 「國民所得倍增計劃」 · 632

## I. 소득배증계획의 의의 · 633

1. 6년만에 국민소득을 배가한 성공적 경제정책 · 633

2. 선진국에 진입한 계기 · 634
3. 고성장과 분배 문제를 동시에 해결 · 635
4. 바람직한 정부 역할을 제시 · 635
5. 소득배증계획과 한국 · 636

## II. 소득배증계획의 배경과 국가 리더십 · 637

1. 소득배증계획의 배경 · 637
2. 국가 리더십 · 639

## III. 소득배증계획의 개요 · 643

1. 달성 목표 · 643
2. 중점 과제 · 645
3. 주요 정책 · 646
4. 추진 체제 · 649

## IV. 소득배증계획의 성과와 성공 이유 · 652

1. 성과 · 652
2. 성공 이유 · 653

## V. 시사점 · 657

1. 정책적 시사점 · 657
2. 이케다 리더십의 교훈 · 659

## 별첨. 주요 정책 내용 · 662

### I. 정부가 직접 추진한 정책 · 662

1. 사회간접자본 충실화 · 662
2. 인적능력 향상과 과학기술 진흥 · 666
3. 사회보장의 충실과 사회복지의 향상 · 669

### II. 정부가 민간부문을 유도한 정책 · 671

1. 무역 및 경제협력의 촉진 · 671
2.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이중구조의 완화 · 674

## 2

## 아데나워 - 라인강의 기적 · 683

### I. 전후 독일의 상황 · 684

### II. 아데나워와 에르하르트 · 687

1. 콘라드 아데나워(Konrad Adenauer) · 688
2. 루드비히 에르하르트(Ludwig Erhardt) · 694

### III. 아데나워 시대의 경제업적 · 704

## I. 「鐵의 여인」 대처 · 706

1. 등장 배경 · 706
2. 「철의 여인」 대처의 등장 · 715

## II. 대처리즘(Thatcherism) · 719

1. 대처리즘 개요 · 719
2. 대처리즘의 주요 내용 · 720

## III. 대처리즘의 성과 · 731

1. 경제적 성과 · 731
2. 정치적 성과 · 737

## IV. 한국에 주는 시사점 · 738

1.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 · 738
2. ‘합의 정치’의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· 739
3. 노사관계 안정과 유연한 노동시장이 경쟁력을 좌우 · 740

## I. 2만불 달성 선진국의 현황 · 742

1. 2만불 달성 국가의 개요 · 742
2. 산업구조와 기업 · 745
3. 노사 관계와 사회 현상 · 747

## II. 「魔의 1만불」과 국민소득 倍增 과정 · 749

1. 「마의 1만불」은 세계 공통 현상 · 749
2. 2만불 진입 소요기간과 진입과정 · 755

## III. 2만불 달성의 비결 · 759

1. 정치 리더십으로 국력을 결집 · 759
2.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 · 761
3. 전통 제조업의 혁신과 신성장 엔진의 발굴 · 764

1. 미국 · 768
2. 일본 · 789

3. 독일 · 821
4. 영국 · 843
5. 룩셈부르크 · 864
6. 노르웨이 · 879
7. 스웨덴 · 892
8. 핀란드 · 911
9. 네덜란드 · 927
10. 아일랜드 · 945
11. 덴마크 · 963
12. 스위스 · 979
13. 싱가포르 · 996
14. 홍콩 · 1012
15. 이스라엘 · 1028
16. 스페인 · 1051
17. 뉴질랜드 · 1067
18. 대만 · 1087
19. 포르투갈 · 1103
20. 그리스 · 1116
21. 아르헨티나 · 1129
22. 브라질 · 1148
23. 중국 · 1163